



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

申 龍 相 (研究委員, 3705-6329)

최근 발표된 세금환급 등을 통한 「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」이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선별성(targeted)과 적시성(timely)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. 이를 위해 혜택이 저소득계층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, 또한 입법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간의 협조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.

- 최근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10.5조원 규모의 세금환급 및 보조금 지급 방안을 발표함.
 - 정부는 국제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과거 2차례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하자 고유가와 경기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·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「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(2008년 6월 8일)」을 발표함.
 - 연간 총급여가 3,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간 종합소득이 2,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연 6만~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 등임.
 - * 이 중 연 24만원을 환급받는 총급여 3,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72%, 연간 종합소득 2,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85%에 해당됨.
 - * 세금환급 재원은 '07년 세계잉여금 잔액(4.9조원)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 예상분(5.2조원) 등을 활용할 예정임.

- 금번 대책은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선별적·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을 택하였음.
 - 특히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방법은 유류소비가 큰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별적(targeted)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판단됨.
 - 과거 미국이 재정정책수단을 동원한 경기진작대책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성(timely), 선별성(targeted), 임시성(temporary) 등 3T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, 특히 적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.

- 한편 금번 대책에는 경기부양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

- 국내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번 대책과 같은 대규모 세금환급대책을 시행한 바가 없어 금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상황임.
-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서 세금환급과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바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.

- 과거 미국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이번 세금환급의 경제적 효과는 정책시행의 적시성과 수혜자들의 소비행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.
 - 과거 미국의 경우 세금환급액의 20~24%만을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축(27~37%) 혹은 부채상환(40~49%)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.
 - 한편 세금환급금에 대한 높은 저축성향으로 세금환급 후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년 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 -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 미국의 세금환급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0% 정도, 장기적으로는 60% 정도가 소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〈표〉 과거 미국의 세금환급액의 용도별 사용 비중

(단위 : %)

| | 용도별 사용 비율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저축 | 부채상환 | 소비 | 합계 |
| 2001년 세금 환급 | 33.8 | 44.9 | 21.3 | 100.0 |
| 2003년 육아비 공제 | 27.0 | 49.0 | 24.0 | 100.0 |
| 2003년 원천징수 유예 | 36.8 | 42.5 | 20.7 | 100.0 |
| 2008년 세금 환급 | 37.4 | 40.2 | 22.4 | 100.0 |

주 : 2008년 수치는 미국 전국소매협회(NRF)의 소비자 의향 및 행태조사 결과임.

- 미국의 경우와 같은 세금환급액의 소비활용도를 국내에도 적용하는 경우, 금번 10.5조원 규모의 세금환급 및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2.1~2.5조원 정도가 소비로 연결되어 향후 1년간 0.25%p 정도, 장기적으로는 0.7%p 정도의 GDP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됨.
 - 다만 미국과 국내 소비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차이가 있어 그 최종적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- 경기부양효과 차원에서만 본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세금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.
- 한편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성(timely action)이 매우 중요하므로 후속 조치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간의 협조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.
 - 과거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의 경우, 정책조율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실제 집행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단계에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.
 - 세금환급의 집행에는 정부와 국회의 조율과 입법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로 인한 적시성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 **KIF**